

# 정예인력육성토론회

지난 4월 27일 aT센터에서 350여명이 참석하고 한농연·한여농이 공동주최 하는 '정예인력육성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예인력육성정책이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공감하고 인력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깊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격려사,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해익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신명운 한농연 정책부회장, 민연태 농림부 경영인력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수만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장, 심점순 한여농 정책부회장, 표영범 경기도청 농정국장, 이기웅 순천대학교 교수, 서규선 한농전 교수가 토론자로 토론이 진행됐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1

후계농업경영인이 바라는 정예농업인력육성방향

"후계농, 창업농제도 일원화 해야"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단일화된 자금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신명운 | 한농연 정책부회장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7.1%수준('04년)에서 매년 0.6%포인트 감소하여 2010년에는 4.7%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는 60세 이상이 39%이고, 20대 이하가 15.6%에 불과한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감소, 농업인력의 공동화 및 급속한 경쟁력 저하 현상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한농연 시군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예인력육성 대책 중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전업농 육성 지원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허나 선정과정 이후 추가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후계농업경영인이 바라는 정예인력육성 방향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제도의 일원화를 지적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창업농 및 후계농 사업지원 조건 및 규모를 단일·체계화 시키고, 연령·사업규모·영농정착의지·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내부적으로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한다.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한농연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계농업인의 보증한도를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정예농업인력은 순차적 단계별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계농업인→전업농업경영인→선도농업경영인 순으로 인력육성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교 교과서를 통

# 정예농업인력육성 토론회

● 일시: 2005년 4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aT센터 3층 중회의실  
 ● 주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 농업·농촌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자금지원 시 농민단체장의 추천서를 필수 구비서류로 인정해줘야 한다. 또한 농업인교육 전담시설을 설립해 농업정책의 활용교육을 높여 농정참여 및 신뢰 회복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은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확보 및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정예농업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원예 선도농가 11만호 육성, 규모화 된 축산 전업농 2만호를 육성해 10년간 신규인력 4만 5천명을 육성하고 대체인력 5만 천호를 육성하는 등 지원인력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정예인력 육성 기본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과계 출신을 육성하고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비농업계에서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농가를 교육에 활용하고 수준별·품목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

주제발표

2

정예농업인력육성 대책

“강력한 신규인력 유입 정책, 교육·경영혁신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민연태 | 농림부 경영인력과장

농가는 추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농가를 지속 발굴·홍보해 잠재인력에 대한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이렇게 선별된 우수농가의 Know-how를 확산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이 용이한 후계농업인 자녀, 4-H, 농과계 학생, 귀농 관심자를 대상으로 성공사례, 농업농촌 비전, 영농정착시 지원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 할 예정이다. 창업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리를 현행 4%에서 인하를 추진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45세 미만의 기존농업인은 후계농으로 선발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민교육에 있어서는 품종부터 마케팅까지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하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농연과 한여농에게는 농정 전반적인 교육과 리더 교육을 맡기고 지역에서는 농민교육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지역만 교육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토론

“한농연 시군회장의 역할 강화”,  
“상사업비 보조 확대시행”

김수만 | 한농연강원도연합회 회장

농촌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교육시설 및 의

료혜택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고, 결혼문제가 심각해 거주하기 어렵고 이농을 부추기는 현실이다. 농촌공동화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후계농업인력육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고소득·주요작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다양한 영농형태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후배양성에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며, 지역에서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해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지방농정의 핵심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인력유입을 위한 선발시 한농연시군연합회장이 영농의지나 경영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을 일원화하고 농업인 교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여성후계인력 적극 육성해야”

심점순 | 한여농 정책부회장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력 중 52.3%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농정에서 인력육성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현재 농업내 기여도, 발전가능성, 연령층 등을 고려한 핵심리더 등을 선발하고, 특화시키는 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품목별·분야별 인력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 품목별로 교육과 훈련, 육성프로그램과 여성농업인의 장점이 특화될 수 있는 분야별 인력육성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

다. 그리고 모든 정책영역에서 여성농업인 할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여성농업경영인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가 필요하다.

“젊은층 인력을 창업농으로  
하는 질적 확대 필요”

■서규선■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농정변화에 따라 인력정책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관계자들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선 예산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정부, 산자부, 교육자원부 등 타부서도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 농림부에 농촌인력과가 신설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정책수혜를 받는 농과계 학생들 중에서 20~30%만이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후계인력이 된다면 젊고 유능한 정예농업인력은 충분히 육성될 것이라고 본다. 한농전의 경우 졸업생의 9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평균 영농소득은 5천4백만원이다. 창업농 육성사업과 일반후계농업인육성 사업을 병행하면서 젊은 층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농 육성을 확대하여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예상한다.

“품목별, 부류별 조직화와  
지속적인 체계 확립해야”

■이기웅■ 순천대학교 교수

농촌인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 도입, 복지정책 강화, 지역 리더 발굴, 지역농업 클러스터와 같은 산학관련 지원조직체의 구성과 지역특성화 교육, 지역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거시적 차원의 맞춤형 교육으로 자원과

사람,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부류별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육사업의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후계인력육성자격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 농업인의 활성화 정책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주체의식이  
있으면 해어나갈 수 있을 것”

■표영범■ 경기도 농정과장

농업인력 육성은 자본·기술·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공동체가 돼야 한다.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도를 그려야 한다. 도시의 고학력, 고능력자를 강력하게 유입해 농촌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젊은 후계농업인이 농촌관광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창업농반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만 사항이다. 어렵다고 하는 농업이지만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개방화 시대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